

제임스 1세와 화약음모사건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교수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결국 무산됐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의 기세를 몰아 해병대원 특검법과 야당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마저 강행하려는 ‘입법폭주’의 전장을 구축하는 상황에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밭상스럽게 짝이 없는 의원들의 개원식을 축하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역전의 국회 ‘정상화’를 외쳤던 대통령의 불참은 1987년 민주화로 3권분립 직선제가 이뤄진 후 처음이라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오만과 불통의 도가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지지를 담보로 무모하고 우둔한 선택을 내린 듯하다.

의회가 정치폭력의 마당이 된 경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다. 다른 역사에도 시공간을 넘나들며 수없이 등장한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황제의 야심을 지닌 줄리어스 시저가 혈육이자 후계자처럼 양육했던 브루투스를 위시한 공화파 의원들에게 무참히 암살된 사건은 고전적 사례에 속한다.

셰익스피어는 로마 사극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의 배반에 대해 만대에 전하는 명대사를 남긴다. 라틴어로 “Et tu, Brute?(에 투 브루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다. 정작 나를 해치는 자는 건넌편 적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잘 아는 심복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다. 심오한 교훈으로 가슴에 새겨 둘만 하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도 유사한 역사가 있었다. 시저의 경우처럼 권력을 향유하려는 의회가

독재 군주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었다. 왕의 새로운 통치방식과 종교적 갈등에 절망한 세력이 군주와 의회를 통째로 제거하려는 필생의 몸부림이었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처럼 자식 없이 사망했다. 따라서 왕위계승문제는 붉은 장미 문장의 랭커스터 가문과 흰장미 요크가 사이에 벌어진 중세 영국의 뼈아픈 상처였던 ‘장미전쟁’처럼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과제였다. 여기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섬나라 영국의 ‘초’ 현실적 생존본능이 그 광채를 발휘한다. 식민지와 다름없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 그의 어머니 메리 스튜어트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반역죄로 처형됐음을 고려한다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분명하다 -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로 발 빠르게 영입한 것이다. 스튜어트 왕조의 서막이다.

1603년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왕국의 군주로 즉위한다. 그런데 불과 이년도 채 못돼 국왕 살해 반란이 터진다. ‘화약음모(Gunpowder Plot)’ 사건’이다.

1605년 11월 5일 잉글랜드 의회 개원일에 맞춰 제임스 1세와 왕비, 대신, 의원들을 몰살하려 한 테러리스트 거사였다. 음모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왕궁과 이어진 의사당 지하실에 화약을 설치했다. 가이 포크스(Guy Fawkes) 등 극단적 가톨릭 신자들이 가담했으나 누군가의 밀고로 거사일 새벽에 발각됐다.

음모의 뿌리는 종교적 ‘왕따’였다. 1588년 잉글랜드가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를 격퇴한 후 가톨릭에 대한 반감과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신앙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은 과격해졌고, 급기야 ‘왕권신수설’에 따라 지상의 하느님으로 비견되는 군주의 암살까지 도모한 것이다. 제임스 1세는 이를 계기로 가톨릭 세력을 탄압하고, 영국국교회(성공회)를 잉글랜드의 국교로 강화한다. 이후 영국

에서 가톨릭과 성공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영국 왕실은 왕의 건재를 과시하려 11월 5일을 불꽃놀이 축제일로 정했다. 세월이 흘러 축제의 성격은 오히려 거사 실패를 아쉬워하는 행사로 변한다. 주동자 가이 포크스의 이름에서 새로운 영어 단어 ‘guy’도 생겨났다. 원래는 부정적 의미로 남성만을 지칭했던 단어가 이제는 성별의 경계를 깨고 여성에게도 두루 쓰인다.

그의 이름보다 유명해진 것은 포크스의 ‘데스마스크’ 가면이다. 19세기 이후 소설에서 영웅 이미지로 포장되고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2006)를 통해 더욱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34년 노스 파이어 극우세력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된 영국이 배경이다.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쓴 히어로 주인공 ‘브이’가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재의 몰락을 알리는 폭탄의 섬광이 어두운 하늘을 불꽃놀이처럼 밝히는 가운데 장엄히 흘러나오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의 울림이 가슴 시리게 감동적이다.

브이의 가면이 바로 가이 포크스의 얼굴이다. 영화의 표상인 그의 가면은 반독재, 반자본주의 시위 현장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2011년 해커그룹 아나니머스가 월가 점령 시위에 사용한 후부터는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를 굳혔다. 반종 홍콩 시위에서도 출현했다.

제임스 1세와 의회를 파괴하려는 화약음모사건이 여기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불참과 자꾸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의 유치한 싸움이 ‘회귀’ 보수와 ‘셀프’ 진보 간의 치졸한 이념전쟁일까 아니면 정치 장인들이 그저 이익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기만적 방위 전략일까, 아리송하다. 그들에게도 가이 포크스의 가면이 혹 나타날까? 비록 영화적 상상이지만 덩달아 흥분되는 걸 감추기 어렵다!

社說

‘민간공항 先이전’ 이제 무안군 화답해야

강 시장 승부수 ‘정치화’ 안돼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전남도와 무안군이 유의미한 약속을 내놓으면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해 왔던 지금까지 광주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통 큰 양보’이면서 진전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당사자간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무안군은 광주시가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수차례 토로했다. ‘광주시의 이기주의’에 대한 불신도 높았다.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이전을 무조건 반대했던 것도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린 광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전남도 또한 이런 이유로 2025년 말 KTX 무안국제공항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광주시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제 그 불신을 서로가 해소시켜야 한다.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첫 출발도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얼마 전 광주연구원도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모두 옮기면 2033년 520만 명, 2044년에는 1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무안공항 이용객을 감안하면 엄청난 잠재력이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에 화답하는 것이다. 최소한 무안군은 지금까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내놓은 강 시장의 결단마저 ‘정치’와 ‘수사’로 받아들여서는 더 이상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6년째 처우개선 없는 열악한 노인돌봄

정부가 관리·감독 등 책임져야

치매환자를 비롯해 노인 신체활동과 가사 노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최근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는 호봉제와 같은 급여규정이 없어 신입과 경력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실제로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요양보호사들의 불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인 수급자와 연쟁이 생기면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 시스템이 한몫해서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없다고 한다. 고용불안은 물론 돌봄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이 다반사이며, 1대1로 이뤄지는 근무 환경에서 이런 감정도동 피해를 대처할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돌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 두면서 사실상 방치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돌봄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16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질 좋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노인돌봄은 정부가 만든 제도다. 민간에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관리·감독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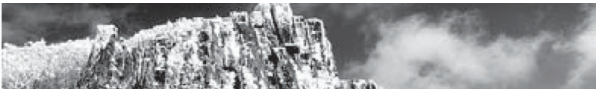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최근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금배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각 유통사에서 조사한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9321원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50.5% 올랐다. 시장과 마트에 유통되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원(소매가)을 넘는 지 오래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폭등을 이끈 건 올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 때문이다. 여름 배추는 주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강원도마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18~20도 수준인 배추 생육환경이 크게 나빠졌다. 겨울배추도 사정이 좋지 않다. 9월 폭우로 인해 겨울배추 최대 생산지인 해남 배추가 피해를 입어서다. 피해 면적만 611ha로 올가을 해남 전체 배추재배 면적(4299ha)의 14%에 이른다. ‘금배추’가 김장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을 때 흔히들 금(金)값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금배추도 이 같은 용어 사용의 산물이다. 그런데 따져보자 금값으로 비유될 만큼, 배추값이 상승했다면 금을 캐는 농부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횡재가 아닌가. 폭염과 폭우로 재배량이 줄었더라도 제값도 아닌 금값을 손에 쥐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농부들은 가난하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 요



인도 크지만 농촌의 인건비·농자재값 상승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농작물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고 각종 외식비도 증가하는데 농작물이라고 가격이 오르지 말란 법은 없다.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농산물을 싸게만 먹는다는 인식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다. 김장철도 아닌 상황에서 배추 가격 상승에 중국 배추 수입을 결정했다. 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지난 2010년(162톤), 2011년(1811톤), 2012년(659톤), 2022년(1507톤)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오는 27일부터 수입된다고 한다. 과거 배추값이 하락할 때 무대책이었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은 ‘너도나도’ 심은 생산자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가혹해 보인다. 농작물의 제값을 받는 건 농민들에게도 정당한 권리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때 가격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당장 김장철도 아닌 상황에 정부의 호들갑스러운 대책에 농가의 꿈은 또다시 무너졌다. 정부의 좀더 신중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가난’을 꿈꾸며 농사를 짓는 어리석은 농부는 어디에도 없다.

김성수 논설위원

전일보

@jnlibo

전일보 인스타그램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jnlibo.com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libo.com